

광주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반려동물 친화도시 첫발

기고



김광남
광주시 수의사회장

최근 광주에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생긴다는 기분 좋은 보도를 접했다. 우리시의 동물시설은 광주동물보호소만 있어 아쉬웠는데 반려동물 문화공원과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니 반려인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28.2%인 552만가구, 1262만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0년 17.4%에서 13년만에 10.8%가 증가했다. 광주도 전체인구 21%인 14만가구, 29만여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과 개식용종식 특별법(2024.2.26.공포)을 시행하는 등 동물복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폐코노미 시대 K-반려동물 산업의 해외시장 발굴 지원 등을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인구는 식품, 의류, 호텔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쳐 반려동물을 잡아야 손님이 모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 자체가 문화이자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시도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한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유기동물 정책 등 동물복지 정책에 대응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에 반려동물 복지팀을 신설하여 민선8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반려인들을 위한 문화공원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는 결정, 내년부터 동물보호센터를 민간 위탁에서 시 직접 운영 전환은 박수 받을 만한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반려인을 접하는 수의사로서 반려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급증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울산, 태안군, 순천 등을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로 선정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숙박, 음식점 등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관광콘텐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광주도 반려동물 카페, 유치원, 훈련센터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동반 식당, 문화시설, 숙박 시설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8월에 역사민속박물관에서 '댕댕아 민속박물관 가지' 반려동물 동반 관람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트피크닉' 행사를 개최했다. 10월 5일 초가을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산업전시 '광주 펫쇼'와 함께 '펫크닉' 행사에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이러한 행사가 많아졌으면 한다.

올해 4월부터 개물림 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 강화 등을 담은 맹견 사육허가제(도사견 등 맹견과 개물림 사고견의 경우 공격성 평가를 거쳐 사육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순했던 강아지가 공격성을 띠고, 산책할 때 사람을 보면서 짖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서울, 경기 등에서 '찾

아가는 우리 동네 훈련사' 등 반려동물 행동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도 꼭 필요하다. 광주시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반려동물과 양육자의 교육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축 광역동물보호센터 완공에 맞춰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광주동물보호센터를 시 직영체제로 전격 개편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은 유기동물 관리를 입양을 제고에 초점을 두고, 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 높은 입양율과 10% 이하의 낮은 안락사율로 동물복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 국내도 대전시는 2011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입양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해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 입양정책은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자치구, 동물병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연계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앞으로 1인 가구 사망으로 인한 동물인수제 등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들개, 야생고양이 등 생태계 교란까지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팀단위 조직이 아니라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과(課) 단위 조직으로 미래를 위한 기본 설계를 촘촘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광주는 5·18의 가치, '생명존중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도시이다. 광주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광주정신'이 유기동물 입양문화로 확대되고, 반려동물 공원 등 인프라 시설부터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기대되는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합의

취지 살려 후속대책 마련해야

교육부와 전남도, 목포대, 순천대 등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지난 14일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최종 통합 의대 설립이 이뤄지기까지는 교직원과 학생, 지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 등 난제가 남아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양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서 전남 국립 통합의대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1도(道)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며 양 대학에 협조를 요청한 뒤 '대학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했다. 통합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배려다. 더 큰 지원도 약속했다. 전남도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남의 30여

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합의가 중요한 것은 통합은 물론이고 공동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던 양 대학이 통합 의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양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크다.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벌였던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다.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지역민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대학 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살려 열린 마음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통합이 어려운 길이고, 구성원들의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양 대학 총장의 다짐에 지역과 지역 대학의 미래가 달려있다. 혁신을 요구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춰 '더 큰 혁신'을 선택한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광주군공항 이전 '막힌 행정' 안타깝다

무조건 반대 떠나 손익 따져야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가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이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정도다. 강 시장은 15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협의에 나서지 않는 무안군이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희을 시의원이 "무안군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강 시장은 "광주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동의될 수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 무안군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공항 통합 문제가 국책사업인 만큼 무안군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 시장은 "KTX가 무안공항역에 들어선 것은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판단이 담겨 있다"며 "무안군이 국책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막는 것은 막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 시장은 연말까지 공항 통합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고려하고 있는 '플랜B'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는 무안으로 통합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방침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후보지가 무안이라는 인식이 크다. 공항 후보지인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야 당연하다. 다만 소음 등의 마이너스 요인만 떠넘기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무작정 반대가 아닌 손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시 광주시는 1조 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고, 전남도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무안군은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조건적 반대가 결코 손해 볼 수 없는 지원을 요구하면 된다. 반대가 아닌 광주시와 전남도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정부 지원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다. 무안 발전을 위한 선택은 군민들의 몫이다. 무안의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b@jnilbo.com

서석대

'96% vs 4%.' 한국 배달업 시장의 민간업과 공공업 간의 격차다. 사실상 대형 배달업의 독점구조다.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 배달업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다.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대기업의 횡포나 다름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역시 민간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방이츠 등 민간배달업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려 예산만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예산이 배달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기업들의 배만 불러주는 형국이다.

민간배달업 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 또한 공공배달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대형 배달업의 독점 속 공공배달업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시의 '배민(배달의 민족) 독립운동'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평균

공공배달업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공공배달업의 점유율이 높은 데는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업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증가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의 '배민 독립운동'은 의미미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는 17%까지 늘었다. 전국 평균 공공배달업 점유율의 4.5배가량 달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호응이 높다.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광주시의 '배민 독립운동'이 큰 관심사가 됐다. 지난 8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업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업 활성화를 위한 '배민 독립운동'이 배달업 시장의 기형적인 독점구조를 타파할 유일한 길이며, 정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쏠아올린 '배민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해 본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